

생산단계를 도외시한 식품안전대책은 있을 수 없다.

-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처 신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김치파동, 만두파동,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식품안전처 신설'은 명목상 설득력이 있다고는 하나 생산단계를 도외시한 대책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식품안전처가 신설되어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관리한다 손 치더라도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실질적인 안전성 관리는 농림부가 할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기존의 중복된 식품업무의 병폐를 답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련의 식품사고는 식약청의 행정미숙으로 빚어진 결과이며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생산부처인 농림부는 지난 '98년부터 생산단계부터 축산물을 일관관리 하게 된 후 축산물 안전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쇠고기이력제, 축산물 브랜드인증제, HACCP 도입 등은 식품안전의 절박성과 중요성을 농업인들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된 것이며 이러한 성과가 평가절하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식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품원료인 농축산물부터 안전성 관리를 일원화시켜 관리하는 것이 근본대책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례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식품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농장에서 밥상까지' 농업 생산부처 중심으로 식품가공업무를 일원화하고 있는 것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식품안전 관리는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농민의 권익에도 중차대한 문제이며 이는 국내의 농축산물의 안전성 여부가 해당 농축산물의 소비는 물론 농가소득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단계를 도외시한 '식품안전처 신설'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진정 식품안전의 근본대책 방안은 현장경험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생산부처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은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마땅하다. 현 농림부가 농업생산에서 식품안전·검사·검역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식품행정의 올바른 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6. 3. 8

한국낙농육우협회